

다산포럼



장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과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06년 1년간 신청을 받고 진실 규명 작업을 한 지 15년 만에 다시 한국 현대사의 어둡고 아픈 부분을 드러내 치유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기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미진했던 사건들을 처리하고, 또 인권 의식의 고양과 함께 새로 제기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작년 12월 10일 진실 규명 신청 첫날, 한 피해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땀고 먼 길을 돌아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들에게 진실 규명 신청은 말하지 못했던 고통과 강요된 침묵을 깨는 것이어서 많은 용기가 필요한 실존적 결단이기도 하다.

그 이후 지금까지 약 7000명의 피해자들이 4000건 정도의 진실 규명 신청을 하였다. 가장 많은 신청은 역시 한국전쟁 직전과 그리고 전쟁 중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이다. 여기에는 보도연맹 관련

진실과 화해로 가는 길

자, 형무소 재소자, 부역 혐의자, 폭격 피해자 등이 포함된다.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로 전체 희생자의 15~20%로 추산되며, 납북자나 미송환 포로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권위주의하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 사건들도 다시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 정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자행된 이념적 탄압과 서산개척단과 같은 노동력 강제 동원, 독재정권 하의 다양한 간첩 조작, 삼청교육대나 강제 징집과 같은 5·18 직후 자행한 국가폭력,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고조기에 행해진 의문사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새롭게 다뤄야 할 문제는 사회사업이나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수용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이다. 부산의 형제복지원이거나 안산의 선감학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한국 사회의 높아진 인권 감수성과 피해 당사자들의 자각에 의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피해 생존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곧 이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형제복지원에서 500여 명, 선감학원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들이 확인되고 있다. 부랑자 일소와 거리 정화는 국가 공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수반했다. 수용시설에서의 아동 인권 침해는 2000년 이후 유럽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새롭게 부상한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의 진실을 밝히는 책임

은 당연히 국가에 있다. 독재 정부가 국가 폭력의 주체였다면 민주 정부는 진실 규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진실이 일시적으로 은폐될 수 있지만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자신의 권위를 되찾게 된다.

진실은 책임의 문제를 수반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처벌로 가는 길보다 사과와 용서의 길을 지향한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화해와 사회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화해는 사회적 타자로 규정되어 죽음을 당한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사죄, 그리고 배·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이 규명된 희생자의 일부는 소송을 통해 배·보상을 받았지만, 진실 규명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진실 규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기회를 놓친 유족들도 많다. 일부 피해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기도 했다.

이제 세계는 이념적 양극화의 시대를 건너 사회적 양극화의 시대로 가고 있다. 현재의 행북을 내일로 사회적 약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며, 이런 노력들은 과거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념적 타자로 간주되었던 피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이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기 이행기 정의의 출발점이다. 철저한 진실 규명과 화해의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청춘 특특

행복은 내 발치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



이효빈
동신대 디지털콘텐츠학과 3학년

이번 학기 수강한 교양 수업의 과제는 2주 동안 행복한 일을 작성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었다. 자신이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인지를 알아 가는 과정인데, 과제를 하며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현재의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작은 행복이 여러 번 쌓이면 큰 행복이 된다고 믿고 있다. 날씨가 좋아서, 또는 내가 먹고 싶다고 한 음식을 엄마가 해주셔서, 며칠 동안 공들였던 프로젝트의 막혔던 부분을 해결하게 돼서, 정말 사소하지만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과제 막바지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행복하다는 느낌도 결국에는 착각이 아닐까?' '컴퓨터가 어떤 상황에 대응하는 값을 출력하는 것처럼?' '사람도 내가 행복해야 할 것 같은 순간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그리고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모든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자신이 꿈꾸던 미래가 현실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 내가 느끼는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은 정의될 수 있는 걸까? 머리가 복잡해졌고,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지만 정작 행복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과연 행복은 어떻게, 무엇으로 느끼는 걸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다. 거기엔 과거 특장이 있다.

과거의 영광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무언가 명백한 성취를 이뤘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대단함을 인정받고, 자신이 느끼는 행복이 공감되길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다. 다만 과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나 때는 말이야'식의 끈대로 인식될 수 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행복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잠시 포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래를 좇다 보면 현재 포기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래에 포기한 만큼의 행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또 '미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행복을 대표하는 단어는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다.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고, 현재의 나를 위해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뜻이다. 현재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나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조직 등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가 없지 않다.

행복에 대한 수많은 명언들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행복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하진 못하고 있다. 이번 과제가 내게 준 하나의 깨달음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선택지를 채워가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 '행복'은 매우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순간순간을 매번 기록으로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나의 하루 속 작은 행복을 찾는 일을 굉장히 즐기게 됐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울한 날에도 작은 행복들은 내 발치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 다만 내가 치지고 힘들어서 눈치 채지 못했을 뿐.

이제 사소한 행복들을 흘러보내지 말자. 하나하나 기록해서 수첩에 간직해 보자. 사소한 일상에,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주변 사람들의 배려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별거라고 생각했지만 별 게 아닌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기고

호국 보훈의 달빛동맹을 위한 제언



박갑룡
송원대 국방경찰학과 교수

해마다 정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들을 위한 추모와 기억을 어찌 멈출 수 있으랴. 참혹한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고, 평화와 미래를 기원하는 일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에서 전국 각지에 현충 시설을 설립하고 해마다 추모 행사를 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랩프 퍼킨 주니어 퇴역 대령에게 '한국전쟁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감동적인 것은 한미 양국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은 94세의 퇴역 노병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점이다. 이는 참전 용사에게 양국 국민을 대표해 최대한 보훈의 예의를 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워싱턴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에서 6·25 때 전사한 미군·한국인 등 4만 3800명의 이름을 새긴 벽을 착공했다. 이날 대통령이 '6·25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함으로써 70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희생된 전사자들에 대한 보훈을 실천에 옮겼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땅도 아닌 미국

땅 수도 워싱턴에 '6·25전쟁 기념공원'을 설립하고 현충 시설인 '추모의 벽'을 세웠다든 점이다. 현충 시설이란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한 시설로서 독립운동 시설과 국가수호 시설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현충 시설은 총 2165개이며 그중에서 독립운동 시설은 936개소, 국가수호 시설은 1229개소이다. 예를 들어 용산 전쟁기념관, 동자동 국립서울현충원, 대전 국립현충원, 화천 자유수호위령탑, 양구 전쟁기념관 등이 그것이다.

그럼 광주광역시 소재 국가수호 시설은 어떻게. 6·25전쟁 호국영웅 명비, 호국 무공수훈자 전공비, 현충탑 등 모두 11개소로, 광주를 대표할 만한 시설이 부족함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에는 국가수호 현충 시설이 이근석 장군 동상, 6·25참전용사 명예선양비 등 14개소가 있다. 그나마 광주광역시보다는 규모와 시설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그러나 대구 역시 타 지역과 비교하면 어려모로 부족하다. 따라서 대구와 광주의 협력적 노력을 통한 상생이 필요하다.

광주와 대구는 2009년 7월 28일 '대구·광주 지역의료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하였는데, 이때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달빛동맹'을 맺은 두 도시는 2015년 광주대구고속도로 양복 4차로 확장 개통, 코로나 19 병상연대, 상호 재난구조 등을 통해 굳건한 협력을 다져왔다. 최근에는 3차원 입체영상(3D) 용량산업, 전기자동차,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전략적 제

휴를 맺었다. 또한 '달빛 내륙철도'와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등 달빛동맹을 토대로 두 지자체를 잇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도시로 단순 에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 도시는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를 통해 국제적 지명도를 가진 도시로 상생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동서화합을 꾀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호국보훈 분야에 있어서도 달빛동맹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의 경우 탐과 비석, 동상 위주의 조형물 시설이 대부분이고 기념관이나 공원, 사적지 등은 다른 곳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달빛동맹 차원에서 호국보훈 관련 예산 확보와 지자체의 관심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광주·대구 지역 현충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양 도시를 대표할 만한 시설 확보가 절실하다. 둘째, 6·25전쟁 당시 격전지인 광주 북구 동림동 옛 산동고 일대에 평화공원(가칭)의 건립과 관련 기념·추모 시설 설립, 성역화 사업이 필요하다. 평화공원이 완성되면 매년 현충 의식을 고양하는 행사를 할 수 있고, 지역 초·중·고생 및 대학생들의 답사·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동고 전사자와 전상자들에 대한 보훈 방안, 산동고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국 산동고 전투의 전사자 30여 명과 전상자 50여 명에 대한 추가 발굴과 위패 봉안, 추모 행사를 매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국민은 또다시 그것을 되풀이한다는 말이 있다. 광주 산동고 평화공원이 호국 보훈의 달빛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후세에 길이 남을 역사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社說

광주 지역 경찰관 기강 해이 도를 넘어섰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 지역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법집행을 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조직폭력배 출신 업자와 부적절한 접촉으로 유착 의혹을 사는가 하면 납치 의심 신고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광주북부경찰 소속 A경위는 지난 4일 밤 광산구 신창동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A경위는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광산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하면 광주서부경찰 소속 경찰관 세 명은 최근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조폭 출신 공급업자와 연락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나 검찰을 받고 있다. '수사·단속 대상과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금지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찰에 적발된 것이다. 특히 이들은 해당 사건 담당 부서에 아닌 데다 금

전 거래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소극적 수사로 시민의 불만을 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최근 새벽 귀갓길에 괴한에게 납치될 뻔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도 강력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처리했다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경찰이 읍주 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단속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올해부터 막강한 수사 권력을 갖게 된 데다 다음 달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경찰들의 비위·일탈 행위는 시민의 불신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경찰의 자정 능력을 의심케 한다. 경찰은 해당 직원들을 엄히 징계하고 감찰 기능 강화 등 철저한 조직 쇄신으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자율 방역' 성공 여부 시민 협조에 달려 있다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어제부터 해제됐다. 6월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광주시가 영업시간 제한을 풀 것이다. 다만 자율·책임 방역 의무는 강화된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실 광주시장은 최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7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독서실·스터디카페는 어제부터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해당 시설에는 영업 중

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이번에도 영업 제한이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 금지도 해제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수칙은 유지된다.

광주시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 방역'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제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만 반쯤을 보이면 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흥시설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시민들도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집단면역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광주형 자율 방역 책임 방역제'의 성공 여부는 순전히 시민들과 유흥업소 업주들에 달려 있다.

無等鼓

오는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이준석 돌풍'의 현실화 여부다. 그는 예비경선을 압도적 1위로 통과한 데 이어 당 대표 적합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타 후보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본선은 예비경선과는 달리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30%로 줄어든다고 당원 투표가 70%나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당선을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30대로 원외인 그가 보수 정당의 당 대표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건이 현실화된다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이준석 돌풍의 배경에는 정치권 세대교체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합리적 보수로의 변화를 갈망하는 당시, 그리고 무능한 진보 정권에 대한 2030 세대의 분노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준석 돌풍이 현실화된다면 기독교 보수·공대 정당의 이미지가 강했던 국민의힘이 혁신의 진원지로 부상하면서 내년 대선 구도를 뒤흔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젊고 똑똑하

지만 자기중심적 이미지가 강한 이 후보가 제1야당 대표가 되면 과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보듬고 대선 국면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분열의 시대를 감싸 안을 포용적 리더십이 약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당선은 당내 중진들과의 불화는 물론, 세대간 분열 등을 촉발시키면서 국민의힘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이준석 돌풍은 무기력증에 빠진 호남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에는 30대는 물론 40대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60대까지 절반에 이를 정도다. 광역·기초단체장 29명 가운데 40대는 김병내 남구청장 단 한 명뿐이다.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문제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적 노쇠화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돌풍은 잠들어 있는 호남 정치권을 깨우는 촉박과 같은 새로운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호남 정치권이 과감한 도전과 응전을 통해 미래 이슈를 선점, 진보 진영의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